



차이나

CHINA Industrial Policy Brief

산업정책 브리프


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
전화 : 86-10-6505-2671/3

이메일 : beijingk@kita.net

1 中, 상표법 전면 개정...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

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6년 6월 26일 〈중국 상표법〉 제5차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, 동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

- 중국 상표법은 1983년 시행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, 이번 개정은 기존의 ‘부분 수정’에서 ‘전면 개정’으로 확대, 총 9장 87개 조항으로 구성

■ 주요 내용

- 상표법 목적 및 기본원칙 확대
 - 기존의 등록상표 보호와 상표관리 중심에서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추진과 상표의 보호·활용·관리·서비스 체계 강화를 법률의 기본 방향으로 추가
 - 상표 등록뿐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도 성실·신용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를 명문화하여 공정한 상표 사용 질서를 강화
- 인터넷·디지털 환경에서의 상표 사용 명확화
 - 인터넷 등 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상표 사용을 법률상 상표 사용 행위로 명시
 - 전자상거래, 온라인 플랫폼, 디지털 마케팅 등 온라인 환경에서의 상표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
- 등록 가능한 상표 유형 확대
 - 기존 문자·도형·입체·색채조합·동작상표(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동작을 나타낸 상표)를 추가하여 등록 대상을 확대

- 다만 상품의 기능이나 기술적 효과를 위한 형태·색채·움직임 등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

- **악의적 상표 출원 규제 강화**

- 악의적 상표 출원으로 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한 경우 경고 및 최대 10만 위안(2,300만원)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처벌을 시행
- 상표 선점과 대량 출원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

- **해외 상표권 보호 규정 신설**

- 해외 상표 등록 및 분쟁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국 정부가 ‘저명상표’ 여부를 공식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

* **저명상표(驰名商标)** : 〈상표법〉에 따라 관련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높은 인지도를 가진 것으로 인정된 상표

- 해외 상표 등록 대리 과정에서 중국 기업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·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

■ 중국 측 전문가 평가

- (화동정법대학교 지식재산권학원 교수 왕옌팡) 이번 상표법 개정은 인터넷 환경에서의 상표 사용을 법률에 명시해 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는 상표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
- 특히 온라인 플랫폼, SNS, 라이브커머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, 플랫폼 내 공정경쟁 질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
- (저장대학교 광화법학원 교수 장웨이쥔) 해외 상표분쟁 과정에서 중국 당국이 중국 내 저명상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중국 기업의 해외 상표권 보호와 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평가

■ 시사점

- 이번 상표법 개정은 상표 등록 중심의 제도에서 실제 사용과 권리 보호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한 것이 특징으로,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
- 특히 인터넷·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상표 사용을 법률상 사용 행위로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, SNS, 라이브커머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상표 관리와 권리

보호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

- 해외 상표권 보호 규정이 신설되면서 중국 기업의 해외 브랜드 보호 역량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,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의 상표권 분쟁 및 권리 행사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
-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중국뿐 아니라 해외 주요 시장에서도 상표권 확보와 분쟁 대응 전략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

자료원 :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, 중국 지식재산권국 등

2 中 지방정부 특별채권 잔액 첫 40조 위안 돌파...부채구조 개편 추진

- 2026년 5월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 특별채권 잔액은 40조 2,572억 위안(9,112조 원)으로 처음 40조 위안을 넘어섰으며, 전체 지방정부 채무 잔액(58조 1,453억 위안)의 69.2%를 차지함
- 중국의 지방정부 특별채권은 2015년 도입 이후 지방 인프라 투자와 경기부양, 지방정부 채무관리의 주요 재정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
- 특별채권 잔액 증가는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과 지방정부의 숨겨진 채무를 법정 지방정부 채무로 전환하기 위한 차환채 발행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
- * 차환채(refunding bond) : 기존에 발행한 채권 등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새로 발행하는 채권
- 중국 정부는 2024~2028년간 총 10조 위안(2,260조 원) 규모의 특별채권을 발행해 지방정부의 숨겨진 채무를 단계적으로 법정 채무로 전환할 계획
- 2026년 1~5월 만기가 도래한 특별채권 원금 가운데 지방정부 자체 재원으로 상환한 비중은 15%에 불과했으며, 대부분은 신규 특별채권 발행을 통한 차환으로 대응
-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토지사용권 매각수입 감소와 일부 특별채권 사업의 수익성 저하로 자체 상환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
- 전문가들은 차환 중심의 상환 구조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지방정부의 채무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

- 중국 정부는 정부부채 구조를 국채 및 지방 일반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정부 특별채권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을 제시
- 특별채권 투자 분야도 기존 인프라 중심에서 농업기술, 양로·보육, 직업교육 등 민생 및 신성장 분야로 확대할 방침
- 아울러 특별채권 사업의 자산관리와 상환재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사업관리 제도를 개선할 계획
- 향후 중국은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방정부 채무관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병행할 것으로 예상됨
- 특히 특별채권 발행 규모와 차환 의존도, 중앙·지방 간 부채구조 조정이 지방재정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

자료원 : 제일재경

3 中, 2027년부터 일부 신에너지차 대상 차량·선박세 우대정책 종료

- 중국 재정부, 국가세무총국, 공업정보화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에너지절감형 자동차와 일부 신에너지차에 적용해온 차량·선박세 우대정책을 종료한다고 발표함
- * **차량·선박세(车船税)** : 중국 내 등록·관리되는 자동차와 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. 차량은 차종과 배기량, 선박은 선종과 톤수 등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정됨
- **(주요 배경)** 중국은 2012년부터 신에너지차 산업 육성과 에너지 절약·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에너지 절감형 자동차에는 차량·선박세를 50% 감면하고, 신에너지차에는 해당 세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음
- 그러나 최근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에 따라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우대정책을 종료하기로 함
- **주요 변경 내용 :**
 - 에너지절감형 자동차에 적용되던 차량·선박세 50% 감면 혜택을 폐지

- 순수 전기 상용차, 플러그인 하이브리드(주행거리 연장형 포함), 연료전지 상용차에 대한 차량·선박세 면제 혜택을 폐지
- 반면 순수 전기 승용차와 연료전지 승용차는 기존과 같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
- 업계에서는 차량·선박세 규모가 크지 않아 우대정책 종료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. 예를 들어 배기량 1.5L 승용차의 차량·선박세는 베이징 420위안(약 9만 4,000원), 상하이 및 광둥성 300위안(약 6만 7,000원) 수준임

자료원 : 재정부

4 中, 중앙 국유기업 AI·반도체 기업 투자 확대

- 중국 국영 엔지니어링 컨설팅 기업인 중국국제공정자문유한공사(CIECC, 中咨公司)는 최근 산하 펀드 플랫폼을 통해 국산 반도체 기업 중청화룽(中诚华隆)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완료함
- CIECC는 중국의 국가급 싱크탱크이자 종합 엔지니어링 컨설팅을 수행하는 유일한 중앙 국유기업으로, 정책 자문과 국가 중대 프로젝트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
- 중청화룽은 〈2025년 과학기술 유니콘 100대 기업〉에서 5위에 선정되는 중국 차세대 반도체 유망기업으로, 핵심 연구진은 엔비디아, 화웨이 하이실리콘 등 글로벌 및 중국 대표 반도체 기업 출신으로 구성됐으며 AI·반도체를 비롯해 범용·슈퍼·양자컴퓨팅 등 차세대 컴퓨팅 인프라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
- 이번 투자는 중앙 국유기업의 반도체 분야 투자 확대 사례로, 중국 정부의 국산 AI·반도체 산업 육성 기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됨

자료원 : 신징바오(新京报)